

금융사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도구는 통신과 단말에서 바뀌었고 책임은 금융에 남았다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감독원은 1,682억원으로 집계했다. 같은 해 국무조정실 집계는 7,744억원이다. 두 값 모두 그해의 공식 숫자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는 두 기관이 세는 범위가 다르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건만 센다. 돈이 계좌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구소는 사기의 진화가 말쑥씨가 아니라 도구에서 일어났다고 본다. 발신번호 조작과 악성앱과 합성 음성은 통신과 단말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피해를 물어 줄 책임은 금융 단계에만 있다.

발행일

2026년 8월 15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분량

본문 21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몰었나

금융사기는 어느 방향으로 진화했는가. 그 방향을 막을 장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바뀐 것은 말쑥씨가 아니라 도구다. 발신번호 조작과 악성앱과 합성 음성이 그 도구다. 2025년 하반기 문자스팸 신고·탐지는 1,288만 건이다. 음성스팸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달에 4.26통을 받는다. 도구는 통신과 단말에서 쓰이는데 배상 의무는 금융회사에만 있다.

통신사업자에게 배상을 지운 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미리 켜 두는 차단 장치 세 가지를 오늘 신청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이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과 은행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눈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해 배상 의무를 지운 조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없다. 금융회사에는 두 가지 경우에 배상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피해액은 기관마다 세는 기준이 다르다. 금융감독원 값과 경찰청 값을 더하거나 섞지 않았다. 표에서도 열을 나눴다.
- 분모가 사람 수인 값과 건수인 값이 섞여 있다. 어느 쪽인지 그때마다 밝혔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사기 수법은 구조와 방향만 적었다.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적지 않았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피해 규모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다	3
2장	바뀐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도구다	6
3장	도구는 통신에 있고 책임은 금융에 있다	9
4장	다른 나라는 어디에서 막는가	12
5장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15
6장	오늘 커 둘 수 있는 장치	17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1

1장

피해 규모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다

같은 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값을 낸다. 먼저 그 이유를 밝힌다.

1,682억원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감독원 · 피해구제 신청 기준	7,744억원 같은 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국무조정실 집계 · 신고 기준	35.9% 2021년 피해금 환급률 금융감독원 · 환급 603억 원
---	---	--

금융사기 피해가 얼마나 큰지 물으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값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2021년이 그렇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피해액을 1,682억원으로 발표했다.¹ 피해자는 13,204명이고, 돌려준 돈은 603억원이었다. 같은 해를 국무조정실은 7,744억원으로 집계했다.² 4.6배 차이다.

두 값 가운데 틀린 값은 없다. 세는 범위가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계좌를 지나간 돈을 센다

금융감독원 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나온다.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분모다. 그러니 돈이 계좌를 지나가야 이 숫자에 들어간다.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는 방식은 오랫동안 이 분모 밖에 있었다. 정부는 2023년에야 이런 방식을 피해구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³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돈도 계좌를 지나가지 않는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값은 범죄 발생 신고에서 나온다.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로 더 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어긋남을 다뤘다. 이 연구원은 경찰 통계와 금융감독원 통계를 한 보고서 안에 따로 나누어 실었고 두 값을 합치지 않았다. 같은 보고서는 사회관계망과 메신저를 쓴 피싱이 집계에 잡히지 않아 줄어 보인다는 지적도 함께 실었다.⁴

두 값 가운데 틀린 값은 없다.
세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한 숫자로 말할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통신 수단으로 남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가로채는 행위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여기서 뺀다.

<표 1> 같은 해인데 두 기관의 값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감독원 집계와 경찰청·국무조정실 집계 (단위: 억 원)

연도	금융감독원	경찰청·국무조정실	오른쪽 값을 낸 곳
2020	2,353	7,000	국무조정실 집계
2021	1,682	7,744	국무조정실 집계
2022	1,451	확인하지 못했다	매체 한 곳뿐이라 쓰지 않았다
2023	1,965	4,782 / 4,472	경찰청 집계 · 자료마다 갈린다
2024	3,801	8,545	경찰청 집계 · 언론 인용
2025	8,255	12,578	경찰청 집계 · 언론 인용

주: 1) 금융감독원 값은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건만 센다. 오른쪽 열 값은 범죄 발생 신고를 센다. 두 값을 더하거나 섞으면 안 된다.

2) 오른쪽 열은 집계 기관이 한 곳이 아니다. 2020년과 2021년은 국무조정실 집계를 인용한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했고,² 2023년부터는 경찰청 집계다. 2024년과 2025년 두 열의 값은 모두 언론 인용값이다.⁵⁶

3) 2023년 경찰청 값은 자료에 따라 4,782억원과 4,472억원으로 갈린다. 연구소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⁷

자료: 금융감독원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3),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

건수와 사람 수가 섞여 있다

기관 사이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 기관 안에서도 분모의 단위가 섞인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발표에서 2020년 피해를 25,859건으로 적었다.⁸ 이듬해 발표에서는 같은 해를 18,265명으로 적었다. 하나는 건수이고 하나는 사람 수다.

이 차이는 1인당 피해액을 낼 때 그대로 드러난다.

<표 2> 같은 해 같은 기관 자료인데 분모가 다르면 값이 갈린다

보이스피싱 1인당·1건당 피해액과 그 분모의 단위

시점	집계 기관과 발표 시점	분모	1인·1건당	분모의 단위
2020년	금융감독원 2021년 4월	25,859	910만 원	건수
2020년	금융감독원 2022년 4월	18,265	1,288만 원	사람 수
2021년	금융감독원 2022년 4월	13,204	1,274만 원	사람 수
2023년	금융감독원 2024년 3월	발표값	1,700만 원	사람 수
2025년	경찰청 · 언론 인용	23,360	5,384만 원	건수

주: 1) 910만원·1,288만원·1,274만원·5,384만원은 피해액을 분모로 나눈 값이다. 1,700만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값이다.⁹

2) 나눈 데 쓴 피해액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이다. 둘 다 금융감독원 발표값이다.¹⁸

3) 2025년 경찰청 값은 언론 인용값이다. 피해액 1조 2,578억원을 발생 23,360건으로 나눴다.⁶

자료: 금융감독원 2020년·2021년·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경찰청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

2020년이 그렇다. 같은 기관이 낸 두 자료를 각각 나누면 910만원과 1,288만원이 된다. 1.4배 차이다. 어느 분모를 썼는지 밝히지 않은 숫자는 그래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돌려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확인된 환급률은 셋이다. 2020년이 48.5%이고 2021년이 35.9%다.¹⁰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환급률은 22.4%로 보도됐다.⁵

2020년에는 100만원을 잃으면 48만 5천원이 돌아왔다. 최근 누적으로는 22만 4천원이 돌아온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의 환급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기사나 발표에서 피해액을 볼 때 집계 기관을 함께 본다. 금융감독원 값인지 경찰청 값인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확인하는 곳 · 기사 본문의 출처 표기, 발표 자료의 표 머리

- 2 1인당 피해액을 볼 때 분모가 사람 수인지 건수인지 본다. 같은 해라도 값이 1.4배 갈린다.

확인하는 곳 · 자료의 표 주석, 단위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두 기관 값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일이 아니다. 둘 다 각자의 기준에서 맞는 값이다.

2장

바뀐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도구다

유형 이름이 아니라 도구를 따라가면 방향이 보인다.

유형 이름이 바뀔 때마다 새 수법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바뀐 것은 사기범이 쓰는 도구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전화를 받는 사람 화면에 실제 발신지와 다른 번호가 뜨게 만드는 것이다. 법령과 고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사업자에게 확인·감시 의무를 지운다.

991억 원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
전체의 58.9% · 금융감독원

1,288만 건

문자스팸 신고·탐지
2025년 하반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26통

음성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
2025년 하반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통계를 유형 이름으로 나눈다.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메신저피싱이다. 이 이름들은 자주 순위를 바꾼다.

2021년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91억원으로 전체의 58.9%라고 적었다.¹¹ 전년보다 165.7% 늘어난 값이다.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옮겨 갔다고 같은 자료가 밝혔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는 대출빙자형이 다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수로 센 값이다. 피해자 열 명 가운데 네 명꼴인 41.9%가 대출빙자형이었다.¹²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늘었다.

2021년 값은 금액으로 센 것이고 2025년 값은 피해자 수로 센 것이다. 순위가 바뀐 것을 새 수법이 나타난 것으로 읽으면 틀린다. 유형 이름은 사기범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리킨다. 바뀐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도구 첫째, 화면에 뜨는 번호

전화를 받으면 화면에 번호가 뜬다. 이 번호는 통신망이 만들어 보여 주는 값이다. 실제 발신지와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 방식은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경찰청은 2025년 3월 주의 안내를 냈다. 실재하는 경찰서 대표번호가 화면에 뜬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¹³ 받는 사람은 화면에 뜬 번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 도구를 막는 규정을 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통신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지운다.¹⁴ 그 가운데 셋이 이 도구와 맞닿아 있다. 첫째, 사설 교환기를 쓰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꾸는지 확인한다. 둘째, 국외에서 걸려 온 전화에 국제전화임을 음성으로 알린다. 셋째, 사칭방지 목록에 든 번호로 발송된 문자를 막는다.

도구 둘째, 단말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두 번째 도구는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사기범이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그것을 조작하는 방식을 범행 수법으로 들었다.¹⁵

이 프로그램이 깔리면 단말을 다루는 사람이 이용자 한 명이 아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 항목에 악성앱 탐지 정보 6개를 따로 둔 것도 이 단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¹⁶

그래서 화면을 잘 보라는 안내만으로는 이 도구를 막지 못한다. 막으려면 프로그램이 깔리기 전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실적으로 확인된 값은 하나뿐이다. 통신사 한 곳과 경찰청이 넉 달 동안 악성앱 2,610건을 찾아 지웠다.¹⁷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전국 단위 통계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도구 셋째, 문자에 담긴 주소

세 번째 도구는 문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를 2,367만 건으로 발표했다.¹⁸ 문자스팸이 1,288만 건, 음성스팸이 873만 건이다.

문자스팸은 상반기보다 59.7% 줄었다. 반대로 음성스팸은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음성스팸이 4.26통이고 문자스팸이 2.74통이다.¹⁹

두 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문자 쪽이 59.7% 줄어드는 동안 음성 쪽은 늘었다.

도구 넷째, 합성한 목소리와 영상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새 도구를 지목했다. 유명인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쓰는 수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국내에서 합성 음성이나 영상을 써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건수는 공개된 통계가 없다. 연구소는 이 규모를 추정하지 않는다.

바깥 자료는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를 쓴 자동전화를 불법으로 정했다.²¹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는 2025년 인공지능 관련 신고 22,364건을 집계했다.²² 피해액은 8억 9,334만 달러다.

<표 3> 건수는 메신저피싱이 많고 금액은 기관사칭형이 크다

금융감독원 집계 유형별 누적 피해, 2022년 1월~2026년 3월

유형	누적 건수	누적 피해액	1건당 피해액
메신저피싱	51,900건	2,015억 원	388만 원
대출빙자형	21,096건	3,669억 원	1,739만 원
기관사칭형	20,632건	6,313억 원	3,059만 원

주: 1) 1건당 피해액은 누적 피해액을 누적 건수로 나눈 값이다.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다.

2) 이 표의 숫자는 언론 세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한 2차 자료다.⁵ 표지와 요약면에는 쓰지 않았다.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

세 유형 가운데 1건당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기관사칭형이다. 기관사칭형 1건은 메신저피싱 1건의 7.9배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내 휴대전화에 국제전화 안내 음성이 나오는지 한 번 확인한다. 고시가 통신사업자에게 이 안내를 지운다.

확인하는 곳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통신사 앱의 부가서비스 화면

- 2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통신사 누리집의 부가서비스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형 이름을 외울 일이 아니다. 유형은 해마다 순위가 바뀐다.

3장

도구는 통신에 있고 책임은 금융에 있다

막는 장치와 물어야 할 책임이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

금융 단계에는 막는 장치가 일곱 가지 있다. 통신 단계를 정한 두 법령에는 배상 규정이 없다. 단말 단계는 사업자 의무를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은행이 스스로 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배상 제도다. 은행의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함께 따져 배상 비율을 정한다.

318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
2025년 10월 말 · 금융위원회

90개 항목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나누는 정보
2025년 10월 · 금융위원회

53건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
2024년 1~5월 · 금융감독원

금융 단계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센다. 막는 장치가 일곱 가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곧바로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한다. 이어서 채권소멸 절차를 밟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²³ 2024년 8월에는 의심 거래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는 임시조치가 들어왔다.²⁴

미리 켜 두는 차단 장치도 셋이 생겼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2024년 8월 23일에 시작됐다.²⁵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025년 3월 12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2025년 11월 14일이다.

정보를 나누는 장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을 열었다. 약 130개 금융회사가 9개 유형 9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나눈다.¹⁶ 그 안에 악성앱 탐지 정보 6개 항목과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항목이 들어 있다.

배상 의무를 진 곳은 금융회사다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물어 주느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두 경우에 금융회사에 배상 의무를 지운다. 대출 신청이나 예금 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급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²³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위조·변조로 생긴 사고에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한다.²⁶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해 배상 의무를 지운 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없다. 이 법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두고 정한 것은 둘이다.²³ 하나는 사기에 쓰인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한다. 다른 하나는 사기에 쓰인 번호와 단말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넘기는 일이다. 둘 다 피해를 물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도 마찬가지다. 통신사업자에게 확인·감시와 차단 의무를 지우지만 피해를 물어 주라는 규정은 없다.¹⁴

은행이 스스로 만든 배상 제도의 크기

은행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자율배상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첫 다섯 달 실적은 신청 53건, 피해금액 13.3억원, 상담 212건이다.²⁷ 배상 대상 금액은 전체 피해금에서 법에 따른 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이 제도가 다루지 않는 사고도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 안내문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을 지시한 거래**를 대상에서 빼다고 적었다.²⁸ 가족을 사칭하거나 겁을 주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누르게 만든 거래가 여기 든다.

2장에서 본 도구들이 만드는 결과가 이것이다. 화면에 뜨는 번호를 바꾸고, 확인 전화를 가로채고, 목소리를 합성한다. 그 결과 본인이 스스로 이체 버튼을 누른다.

연구소는 여기에서 어긋남이 생긴다고 본다. 도구는 통신과 단말에서 작동하는데, 그 도구가 만들어 낸 결과는 배상 제도 밖으로 나간다.

<표 4> 도구가 있는 자리와 책임이 있는 자리가 다르다

단계별로 본 사기 도구, 막는 장치, 배상 의무, 실적 공시 (2026년 8월 기준)

단계	사기가 쓰는 도구	막는 장치	배상 의무	실적 공시
통신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짜 안내 문자	확인·감시 체계, 국제전화 음성 안내, 사칭방지 목록 문자 차단	규정 없음	공개 자료 없음
단말	악성앱, 원격제어 프로그램	악성앱 탐지와 삭제	확인하지 못했다	통신사 한 곳의 녀 달치 2,610건
금융	계좌 이체, 비대면 대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임시조치, 안심차단 셋, 정보공유 플랫폼	본인확인과 지급정지 의무를 어기면 금융회사가 문다	가입자 수, 자율배상 신청 건수

주: 1) 통신 단계 의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정한다. 두 곳 모두에 배상 규정은 없다.²³¹⁴

2) 단말 단계는 사업자 의무를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 표의 장치는 정부와 사업자 발표에 나온 조치다.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정리.

공시되지 않는 것들

실적을 공개하는 단계도 금융 쪽에 몰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를 318만 명으로 밝혔다.²⁵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52만 명이다. 둘 다 2025년 10월 말 기준이다.

그런데 안심차단을 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몇 건이 막혔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국제전화 안내 음성이 몇 통에 붙었는지, 도용된 번호를 자동으로 막은 건수가 몇 건인지도 없다.

통신사가 내놓은 국제전화 수신차단과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도 그렇다. 요금이 없다는 안내는 있지만 가입자 수와 차단 실적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²⁹

막는 장치를 늘리는 일과 그 장치가 얼마나 막았는지 밝히는 일은 다르다. 지금은 앞의 일만 하고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피해를 입었다면 내 사고가 은행권 자율배상 대상인지 먼저 묻는다.
본인이 직접 이체한 건은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하는 곳 · 계좌를 만든 은행 상담창구. 필요한 서류와 적용 여부를 알려 준다

- 2 배상 신청을 하려면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가 필요하다. 신고할 때 함께 챙긴다.

확인하는 곳 · 경찰 신고 접수 뒤 담당 부서, 그리고 은행 영업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배상 비율을 미리 계산할 일이 아니다. 산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4장

다른 나라는 어디에서 막는가

책임을 어느 단계에 지웠는지가 나라마다 다르다.

싱가포르의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각각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못 지킨 쪽이 손실을
물게 했다.

승인된 지급 사기

이용자가 속아서 스스로
송금 버튼을 누른 사기를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계좌를 몰래 도용한 사기와
나누어 다룬다.

8만 5,000파운드

영국 의무 배상 상한

2024년 10월 시행 ·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2억 4,960만 파운드

영국이 12개월간 돌려준 금액

2025년 4월~2026년 3월

5,000만 호주달러

호주 의무 위반 과징금 상한

2025년 1월 · 호주 재무부

싱가포르의 의무를 나눠 지웠다

싱가פור는 2024년 12월 공유 책임 체계를 시작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각각 지켜야 할 의무를 정했다.³⁰

통신사가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는 사기 문자를 거르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는 출금 거래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어느 쪽도 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을 무는 순서도 정했다. 금융회사가 먼저이고 통신사가 그다음이다. 각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쪽이 손실 전부를 문다. 둘 다 지켰을 때에만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체계는 가짜 화면에 계좌 정보를 넣게 만든 피싱만 다룬다. 악성앱을 쓴 사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로 통신사가 손실을 문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은 배상을 의무로 만들었다

영국은 2024년 10월 7일 의무 배상 제도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속아서 스스로 보낸 송금도 배상 대상이다.³¹

제도의 내용은 네 가지다. 배상 상한은 8만 5,000파운드다. 감독청은 이 상한이 건수로는 사기의 99.8%를, 금액으로는 90%를 덮는다고 적었다. 배상액은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절반씩 나눠 문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몫은 100파운드까지이고 취약한 이용자에게는 물릴 수 없다. 청구를 받으면 5영업일 안에 배상한다.

영국 지급결제감독청은 배상 실적을 분기마다 공개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2억 4,960만 파운드를 돌려줬다.³² 제도가 시작된 2024년 10월 7일부터 2026년 3월까지 누적 배상률은 88%다. 제도가 적용되는 청구를 분모로 한 값이다.

같은 나라의 다른 값도 있다. 영국금융협회가 낸 2025년 값으로 계산하면 배상률이 61.5%다.³³ 분모가 다르다. 앞의 값은 제도가 적용되는 청구만 세고, 뒤의 값은 모든 송금형 사기를 센다.

영국도 통신 단계에는 차단 의무만 지웠다. 2025년 1월 29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영국 유선번호를 표시하는 통화를 통신사가 막아야 한다.³⁴ 문자 쪽 의무는 2027년에 시작한다. 통신사에 배상 의무를 지운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호주는 세 분야를 한 체계에 넣었다

호주는 은행과 통신사와 디지털 플랫폼을 함께 지정했다.³⁵ 세 분야에 예방·탐지·차단 의무를 공통으로 지운다.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문다.

피해자는 사업자 내부 절차를 먼저 밟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민원기구로 간다. 민원기구는 사업자별 책임 비중을 따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핵심 의무는 2027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성과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일본은 회수, 미국은 발신번호 인증이다

일본은 범죄에 쓰인 계좌에 남은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이다. 예금보험기구는 2024회계연도에 49억 1,100만 엔을 지급했고 지급률은 87.7%였다.³⁶ 계좌에 남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용자가 알고 동의해 시작한 이체를 무단 이체로 보지 않는다.³⁷ 속아서 스스로 보낸 송금은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 미국은 발신번호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업계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낸 자료가 있다. 2025년 중반 주요 사업자 사이 통화의 약 84%가 서명과 검증을 거쳤다.³⁸ 같은 자료는 서명된 통화의 60% 이상이 옛 통신망 구간을 지나며 인증 정보를 잃는다고 적었다.

<표 5> 여섯 나라 가운데 통신사에 손실을 물린 곳은 싱가포르다

이 보고서가 살펴본 여섯 나라의 금융회사·통신사 배상 책임 (2026년 8월 기준)

나라	금융회사 배상	통신사 책임	시작 시점
한국	본인확인과 지급정지 의무 위반 시 배상. 은행권 자율배상 별도	차단 의무만 있음	자율배상 2024년 1월 1일
영국	의무 배상. 상한 8만 5,000파운드.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절반씩	차단 의무만 있음	2024년 10월 7일
싱가포르	손실 부담 1순위. 정해진 의무를 어기면 전부 문다	손실 부담 2순위. 문자 의무를 어기면 문다	2024년 12월 16일
호주	민원기구가 사업자별 책임 비중을 정한다	같은 체계에 들어간다	2027년 3월 31일
일본	계좌에 남은 돈을 나눠 준다	확인하지 못했다	2008년 7월
미국	속아서 스스로 보낸 송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없음

주: 1) 싱가포르 손실 부담 순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발표문에서 확인한 1차 자료다.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과 세부 의무는 법무법인 해설을 따른 2차 자료다.³⁰

2) 호주는 핵심 의무 시작일이 2027년 3월 31일이다. 성과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3) 일본의 시작 시점은 예금보험기구가 채권소멸 공고 업무를 시작한 때다.³⁶

자료: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일본 예금보험기구, 미국 연방규정집 자료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해외 송금이나 해외 결제를 자주 한다면 그 나라 제도가 어떤지 미리 본다. 나라마다 보호 범위가 다르다.

확인하는 곳 · 해당 나라 감독기구 누리집의 소비자 안내면

2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물어야 할 곳은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 1332, 계좌 개설 금융회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다른 나라 제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계산할 일이 아니다. 집계 기준과 지급망이 다르다.

5장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향해 말한다.

도구가 통신과 단말에 있는데
책임이 금융에만 있으면, 도구를
줄일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6억 건

영국 통신사가 한 해에 막는 사기 의심
문자

최소 추정 · 2026년 7월 · 영국 통신·
방송규제청

4영업일

영국이 의심 송금을 늦출 수 있는 기간

2024년 10월 30일 시행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87.7%

일본 피해회복분배금 지급률

소멸된 예금 채권 대비 · 2024회계연도 ·
예금보험기구

연구소는 네 가지를 짚는다.

첫째, 두 기준을 함께 공표한다

같은 사안을 두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센다. 그러면 정책이 효과를 냈는지 재기
어렵다. 1장에서 본 것처럼 한 해 값이 4.6배까지 벌어진다.

기준을 하나로 합칠 일은 아니다. 두 값을 나란히 내고 각 값이 무엇을 세고
무엇을 빼는지 함께 밝히는 방법이 있다.

둘째, 통신과 단말 단계의 실적을 공시한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안심차단 가입자 수와 자율배상 신청 건수다. 둘 다 금융 단계의 숫자다.

통신 단계에서는 도용 번호를 자동으로 막은 건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제전화 안내 음성이 붙은 통화 수도 없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건수는 2022년 8월까지만 확인했다.³⁹

단말 단계도 마찬가지다. 확인된 악성앱 삭제 실적은 통신사 한 곳의 녀 달치 2,610건뿐이다.¹⁷

영국 통신·방송규제청은 통신사가 한 해에 최소 6억 건의 사기 의심 문자를 막는다고 밝혔다.⁴⁰ 규모가 공표되면 무엇이 남았는지도 셀 수 있다.

셋째, 책임을 어느 단계에 둘지 정한다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배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 두 건이 올라와 있다.⁴¹ 금융권은 정부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재원을 나누는 공동기금을 제안했다.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각각 의무를 정하고 못 지킨 쪽이 물게 했다. 호주는 은행과 통신사와 플랫폼을 한 체계에 넣었다. 두 나라 모두 금융 한 곳에만 지우지 않았다.

연구소는 어느 방식이 옳은지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다만 도구는 통신과 단말에 있고 책임은 금융에만 있다. 그러면 도구를 다루는 쪽에 그것을 줄일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넷째, 결정을 늦출 시간을 만든다

영국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사기가 의심되는 송금을 최장 4영업일까지 늦출 수 있게 했다.⁴² 늦춘 사실과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늦춰서 생긴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기관이 문다.

국내에도 의심 거래를 늦추는 임시조치가 2024년 8월에 들어왔다.²⁴ 이 조치가 몇 건에 적용됐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개정안 두 건은 아직 국회에 있다. 통신사와 플랫폼에 책임을 나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소는 어느 쪽으로 갈지 단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정한 배상 한도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다. 다른 하나는 그 재원을 금융회사만 대는지 여러 업권이 나누는지다. 마지막은 통신 단계 차단 실적이 정기 통계로 공표되기 시작하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피해액 발표를 볼 때 환급액이 함께 나오는지 본다. 나오지 않으면 얼마가 돌아왔는지 알 수 없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발표 자료의 표 항목

- 2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의 배상 한도를 확인한다. 한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확인하는 곳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 이름으로 찾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예상할 일이 아니다. 통과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6장

오늘 켜 둘 수 있는 장치

수칙을 외우는 대신 미리 켜 두는 장치를 절차로 적는다.

차단 장치는 사고가 난 뒤에는 켤 수 없다. 아무 일 없을 때 켜 두는 것이 이 장치의 쓰임이다.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앱이다. 내 계좌와 카드를 한 곳에서 보고 안심차단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다.

4,012개

여신거래 안심차단 참여 금융회사
2024년 8월 · 금융위원회

252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자
2025년 10월 말 · 금융위원회

3,608개

오픈뱅킹 안심차단 참여 금융회사
2025년 11월 · 금융위원회

미리 켜 두는 차단 장치가 셋 있다. 셋 다 내 이름으로 남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막는다.

<표 6> 미리 켜 두는 차단 장치 세 가지

이름, 막는 대상, 시행일, 참여 금융회사 수, 가입자 수

이름	무엇을 막는가	시행일	참여 금융회사	가입자 수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이름으로 나가는 비대면 대출과 카드로, 신용카드 발급	2024년 8월 23일	4,012개	약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내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드는 것	2025년 3월 12일	확인하지 못했다	약 252만 명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	2025년 11월 14일	3,608개	공개 자료 없음

주: 1) 가입자 수는 2025년 10월 말 기준이다.²⁵ 2026년 값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2) 참여 금융회사 수는 시행 시점의 값이고 서비스마다 대상 범위가 다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4,012개는 2024년 8월 시행 자료의 값이다.⁴³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보도자료(2024년 8월, 2025년 3월, 2025년 11월)를 정리.

신청하는 순서

오픈뱅킹 안심차단의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이다.²⁵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2024년 8월
시행 당시 영업점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신청과
대리인 신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⁴³

앱으로 할 때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깔고 본인 확인을 한다. 그다음 안심차단
메뉴로 들어가 그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본다.

영업점에서 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간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도
창구에서 함께 묻는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해제할 때 영업점에 직접 가야 한다.²⁵ 사기범이 몰래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나머지 둘의 해제 방법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묻는다.

켜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까운 시일에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으면 순서를 바꾼다.
필요한 거래를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켜는 거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미 받은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안심차단을 신청한다.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

- 2 부모나 조부모의 휴대전화에도 같은 신청을 함께 한다. 영업점에서 대리 신청 조건을 묻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영업점 창구

- 3 통신사 부가서비스에서 국제전화 수신차단과 번호도용 문자차단을 켜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은 요금이 없다.

확인하는 곳 · 통신사 고객센터 114, 통신사 앱의 부가서비스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출을 곧 받을 계획이 있으면 지금 켜지 않아도 된다.

거래를 끝낸 뒤에 켜면 된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통신 수단으로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다.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뺑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널리 부르는 말이다. 기관에 따라 세는 범위가 다르다.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메신저피싱

사기범이 무슨 말을 했는지로 나눈 유형 이름이다. 각각 기관을 사칭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쓴다.

스미싱

문자에 담긴 주소를 눌러 가짜 화면으로 가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깔게 하는 방식이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전화를 받는 사람 화면에 실제 발신지와 다른 번호가 뜨게 만드는 것이다. 변작이라고도 부른다.

악성앱

휴대전화에 깔려 이용자 모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원격제어와 통화 가로채기 기능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기이용계좌와 피해금 환급

사기범이 피해금을 받는 데 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다. 이 계좌에 남은 돈을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피해금 환급이다.

안심차단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미리 막아 두는 서비스다. 세 종류가 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은행이 스스로 정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하는 배상 제도다. 은행권 자율배상이라고도 부른다.

발신번호 인증

통화에 전자서명을 붙이고 받는 쪽 통신사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쓰고 있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이 보고서가 확인한 자료는 서로 다른 39건이고 그 가운데 1차 자료가 33건이다. 1차 자료는 발표 기관 원문과 전재본, 법령 자료, 해외 규제기구 원문이다. 표지와 세 줄 요약, 장 앞 숫자 상자에는 1차 자료만 썼다. 각주는 43개이고 하나의 자료를 여러 각주에서 나눠 인용한 곳이 있다. 각주에 기관명과 자료명, 주소, 확인일, 자료 등급을 적었다.

각주

1. 금융감독원,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2022.4.20.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2023.9. 국무조정실 집계를 인용한 값이다. kicj.re.kr (1차 · 2026.8.15 확인)
3.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 2023.2.21. KDI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3), 같은 보고서의 국문요약. 2022년 감소는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 부분이라고 적었고, 사회관계망·메신저 피싱이 집계되지 않아 줄어 보인다는 주장을 함께 실었다. (1차 · 2026.8.15 확인)
5.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다. 스포츠서울·더퍼블릭·청년일보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thepublic.kr (2차 · 2026.8.15 확인)
6. 경찰청 집계를 인용한 보도다. 2025년 값은 헤럴드경제·미디어오늘, 2024년 값은 헤럴드경제·뉴데일리에서 확인했다. biz.heraldcorp.com (2차 · 2026.8.15 확인)
7. 2023년 경찰청 값은 헤럴드경제가 4,782억원, SK텔레콤·경찰청 공동 발표가 4,472억원으로 적었다. news.sktelecom.com (2차 · 2026.8.15 확인)
8. 금융감독원,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2021.4.15. KDI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9. 금융감독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2024.3.7. 1,700만원은 이 자료의 발표값이다.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10. 2020년 환급 1,141억원·48.5%는 2021.4.15 발표, 2021년 603억원·35.9%는 2022.4.20 발표에서 확인했다. (1차 · 2026.8.15 확인)
11. 금융감독원 2022.4.20 발표. 메신저피싱 991억원, 전체의 58.9%, 전년 대비 165.7% 증가. (1차 · 2026.8.15 확인)
12.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5-13호, 2025.5.21 배포. 피해자 수 기준이며 금액 기준이 아니다. abllife.co.kr (1차 · 2026.8.15 확인)
13. 일본 경찰청, 「경찰을 사칭한 전화번호에 주의」, 2025.3.25 게시. npa.go.jp (1차 · 2026.8.15 확인)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2026.7.10 개정. ulex.co.kr (1차 · 2026.8.15 확인)
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3), 같은 보고서. 악성앱을 쓴 신종 수법, 원격제어 앱 설치와 조작, 금융기관 웹사이트 링크를 담은 문자 발송을 범행 수법으로 들었다. (1차 · 2026.8.15 확인)
16.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2025.10.29. KDI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17. SK텔레콤·경찰청, 2025.4.16 발표. 통신사 한 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값이다. news.sktelecom.com (1차 · 2026.8.15 확인)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2026.5.14. KDI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같은 자료. 문자 2.74통과 음성 4.26통을 더해도 전체 10.35통이 되지 않는다. 전체 값에 전자우편 등이 들어 있다. (1차 · 2026.8.15 확인)

20.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2025.2.18. KDI 전재본.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2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Makes AI-Generated Voices in Robocalls Illegal」, 2024.2.8. docs.fcc.gov (1차 · 2026.8.15 확인)
22.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2025 IC3 Annual Report」 39쪽. 신고에 적힌 내용만 센 값이라 실제보다 적게 잡힐 수 있다. ic3.gov (1차 · 2026.8.15 확인)
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8.4 시행판. 법령자료 한 곳에서 확인했다. nepla.ai (1차 · 2026.8.15 확인)
24. 법률신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2024.2.27 개정, 같은 해 8.28 시행이다. lawtimes.co.kr (2차 · 2026.8.15 확인)
2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 2025.11.13 배포. 세 서비스의 시행일과 가입자 수, 참여 회사 수, 신청 경로가 여기 있다. ifpk.org (1차 · 2026.8.15 확인)
26.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회사 책임 조항, 2025.12.16 시행판. 접근매체 위조·변조 사고, 거래지시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얻은 접근매체를 쓴 사고 셋을 금융회사 배상 대상으로 적었다. nepla.ai (1차 · 2026.8.15 확인)
27.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 2024.6.18 배포. abllife.co.kr (1차 · 2026.8.15 확인)
28. KB증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고객안내문」.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이 안내문에 없다. kbsec.com (1차 · 2026.8.15 확인)
29. KT,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안내. 요금은 무료이고 가입자 수와 차단 실적은 없다. product.kt.com (1차 · 2026.8.15 확인)
30.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공유 책임 체계 발표문에서 손실 부담 순서와 대상 범위를 확인했다. imda.gov.sg (1차 · 2026.8.15 확인) 시행일 2024.12.16과 금융회사·통신사의 세부 의무는 법무법인 리드스미스 해설에서 확인했다. reedsmith.com (2차 · 2026.8.15 확인)
31.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PS25/5 APP scams reimbursement policy statement」, 2025.5. psr.org.uk (1차 · 2026.8.15 확인)
32.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APP scams reimbursement dashboard」, 2026년 1분기까지. psr.org.uk (1차 · 2026.8.15 확인)
33. 영국금융협회, 「Annual Fraud Report 2026」. 2025년 송금형 사기 피해가 5억 7,640만 파운드,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억 5,430만 파운드다. 61.5%는 뒤의 값을 앞의 값으로 나눈 파생값이다. ukfinance.org.uk (1차 · 2026.8.15 확인)
34. 영국 통신·방송규제청, 해외 발신 통화 차단 의무 안내, 2025.1.29. ofcom.org.uk (1차 · 2026.8.15 확인)
35.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Scams Prevention Framework」 안내면에서 지정 분야와 의무 시작일 2027.3.31, 분쟁해결 기구를 확인했다. accg.gov.au (1차 · 2026.8.15 확인) 과징금 상한 5,000만 호주달러는 호주 재무부 2025년 1월 자료에 있다. treasury.gov.au (1차 · 2026.8.15 확인)
36. 일본 예금보험기구, 2024회계연도 진화사기구제법 공고 실적. dic.go.jp (1차 · 2026.8.15 확인)
37. 미국 연방규정집 12 CFR 1005.2(m)과 1005.6. 알고 동의해 시작한 이체는 무단 이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ecfr.gov (1차 · 2026.8.15 확인)
3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발신번호 인증 효과에 관한 3년 주기 보고서, 2025.12.19. docs.fcc.gov (1차 · 2026.8.15 확인)
39.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다. 2019년 7,106건, 2021년 2,424건, 2022년 8월까지 5,749건이다. publictoday.co.kr (2차 · 2026.8.15 확인)
40. 영국 통신·방송규제청, 「Combatting mobile messaging scams」, 2026.7.15. 개인 간 문자 의무는 2027.1.18, 기업 문자 의무는 2027.7.15에 시작한다. ofcom.org.uk (1차 · 2026.8.15 확인)
41. 뉴스핌·서울경제 보도. 개정안 두 건의 배상 한도와 금융권 부담 추산치, 공동기금 제안이 실려 있다. newspim.com (2차 · 2026.8.15 확인)
4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G24/6 지급 관련 위험기반 접근 지침」, 2024.11.22. 지급서비스(수정)규정은 2024.10.30 발효했다. fca.org.uk (1차 · 2026.8.15 확인)
43. 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자료, 2024.8.23 배포. KDI 전재본. 시행일과 참여 금융회사 4,012개가 여기 있다. eiec.kdi.re.kr (1차 · 2026.8.15 확인)



제목	금융사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19 · NEXUS Research 2026_19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5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사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넥서스 리서치 2026_19,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